

발 간 등 루 번 호
12-1025000-000002-01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실

서 문

국민은 국가안보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과 사회의 안정을 보다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평화로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 목표는 ‘평화 지키기’에서 나아가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유능하고 강한 안보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튼튼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을 강화해 책임국방을 구현할 것입니다.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안보위협을 제거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각종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포괄적 안보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결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안보 위협과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위기

관리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안보전략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 드리기 위해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안보전략 목표와 기조, 그리고 과제별 추진방향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정부의 안보전략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구도를 해체하는 역사적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없애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2018년 11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C o n t e n t s

I. 새로운 안보환경

1. 한반도 정세	9
2. 세계 정세	12
3. 도전과 기회	15

II.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개관

1. 국가비전	23
2. 국가안보 목표	25
3. 국가안보전략 기조	27
4. 국가안보전략 과제	32

III.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

1.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37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0
3.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41

IV.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및 공동번영 실현

1. 남북대화 정례화 및 남북관계 제도화	47
2. 남북교류 활성화 및 인도적 문제 해결	50
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56
4.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제고	60

V.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 강화

1.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	67
2. 「국방개혁 2.0」을 통한 정예화된 강군 건설	69
3. 우리 군 주도의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축	73
4.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 육성	75

VI.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추구

1.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83
2. 외교 다변화를 통한 외교의 외연 확대	90
3. 중견국으로서의 국제역할 확대	95

VII.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위기관리체계 강화

1. 국가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발전	101
2.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능력 강화	103
3. 테러 대응체계 보완 및 발전	106
4. 재외국민 안전 및 권익 보호	108



I

새로운 안보환경

1. 한반도 정세
2. 세계 정세
3. 도전과 기회



(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2018. 4. 27.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 평양공동사진취재단)

| 2018. 9. 20. |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I . 새로운 안보환경

I

1. 한반도 정세

2018년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역사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연이은 남북 · 북미 정상회담으로 긴장 국면에서 대화 분위기로 전환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지속된 북한 도발로 인한 긴장 국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졌다. 그 노력의 결실로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2018년 4월 · 5월 · 9월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새로운 안보환경이 가시화되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문점선언」에 합의하였다.

같은 해 9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특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여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 실천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전쟁 없는 한반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북미 정상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사진: 연합뉴스)

| 2018. 6. 12. |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하였다.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 공동번영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나아가는 시대정신을 수용함으로써 역사적인 대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남북관계의 지속 발전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고위급회담, 실무회담 등 다양한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체육·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조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 추진 등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평화가 일상이 되는 새로운 안보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해·협력적인 남북관계와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우호적인 북미관계가 선순환되면서 발전되어야 한다.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한반도 안보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세계 정세

주요국들 사이의 영향력 경쟁과 군비경쟁 확대

미국은 향후에도 상당기간 외교·군사·경제 분야에서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지역별로는 다극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 사이에 협력과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국제질서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교차하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한편 미중 간에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역내 국가들 사이에 안보분야 협력이 더딘 상황에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표면화됨에 따라 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 유지'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통해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역내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 전력의 전진 배치, 핵·재래식 전력 현대화 및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一带一路)'에 기반한 새로운 안보·경제 협력 메커니즘 설립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 신속대응 및 원거리 투사능력 확대, 우주·사이버 역량 강화, 해·공군력 현대화 추진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 기반하에 미국과 해양·우주·사이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방예산 증액과 첨단전력 개발 등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등 주요 국제문제에 개입하는 등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군사력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영향력 확대 노력과 군비경쟁은 우리 안보비용을 증대시키고, 동북아 협력과 북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지분쟁 발생 가능성 증가

세계적으로는 영토, 종교, 인종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분쟁 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 분쟁, 이스라엘-아랍국 갈등을 포함한 중동문제,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다양한 테러 세력의 준동 등으로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영토와 해양 관할권 갈등, 해상 교통로 확보 경쟁을 둘러싼 마찰 등이 관련국들의 지정학적 이익이나 민족주의와 연계되어 우발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의 다양화와 범위 확대

최근 세계정세에서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이슈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화의 가속화로 극단주의 이념의 전파가 빨라지고 있다. 테러리즘은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테러조직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이나 제3국에서 테러와 연계될 경우 국제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적, 자생적 테러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정보화 시대에는 사이버 공격 위협도 심각한 안보 문제이다. 익명성과 초국경성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사이버 범죄와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역별·국가별 경제 불균형의 확대, 보호무역주의 심화, 무역·금융 질서 주도권 경쟁 등 경제 분야에서의 국가 간 대립이 확대되면서 국제경제의 불안정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자원 고갈, 테러리즘, 환경오염, 지구촌 빈부격차 등과 결합되고 심화됨으로써 개별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에너지·환경·보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 대규모 자연재난·감염병·마약밀매·난민 문제 등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인 규모로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국제적 공동대처와 아울러 국내적으로도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I

3. 도전과 기회

오늘날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고 안보상황의 급격한 변화, 위협의 다양화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여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번영에도 기여해야 한다.

급변하는 정세와 새로운 도전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과 과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그간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의 최대 안보위협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해 왔다. 그러나 남북·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번영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역내 국가들 간 상호관계의 유동성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도전 중의 하나이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주

변국 사이의 긴장과 군비경쟁이 심화될 경우 우리의 외교적 활동공간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역내 국가들과 개별 혹은 다자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 감염병, 마약 및 난민 문제 등 새로운 안보위협으로부터 우리도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함에 따라 대내적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안보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국익을 반영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도전을 기회로 승화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 정전상태 종결 및 평화체제로의 전환 모색은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그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대규모의 인적·물적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활동공간이 제약받아 왔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러한 제약점을 해소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해양과 대륙 세력 사이의 교차점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우리 입지를 제약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역내 국가 간 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 양 세력 간의 교량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주의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헌정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 및 평화적 문제 해결 방식 등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적 역량과 이에 기반한 정부의 정통성은 국가의 잠재역량을 확장시킬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첨단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적자원과 풍부한 문화적 창조력 등에서 나오는 성장 잠재력 또한 무한하다.

우리는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위협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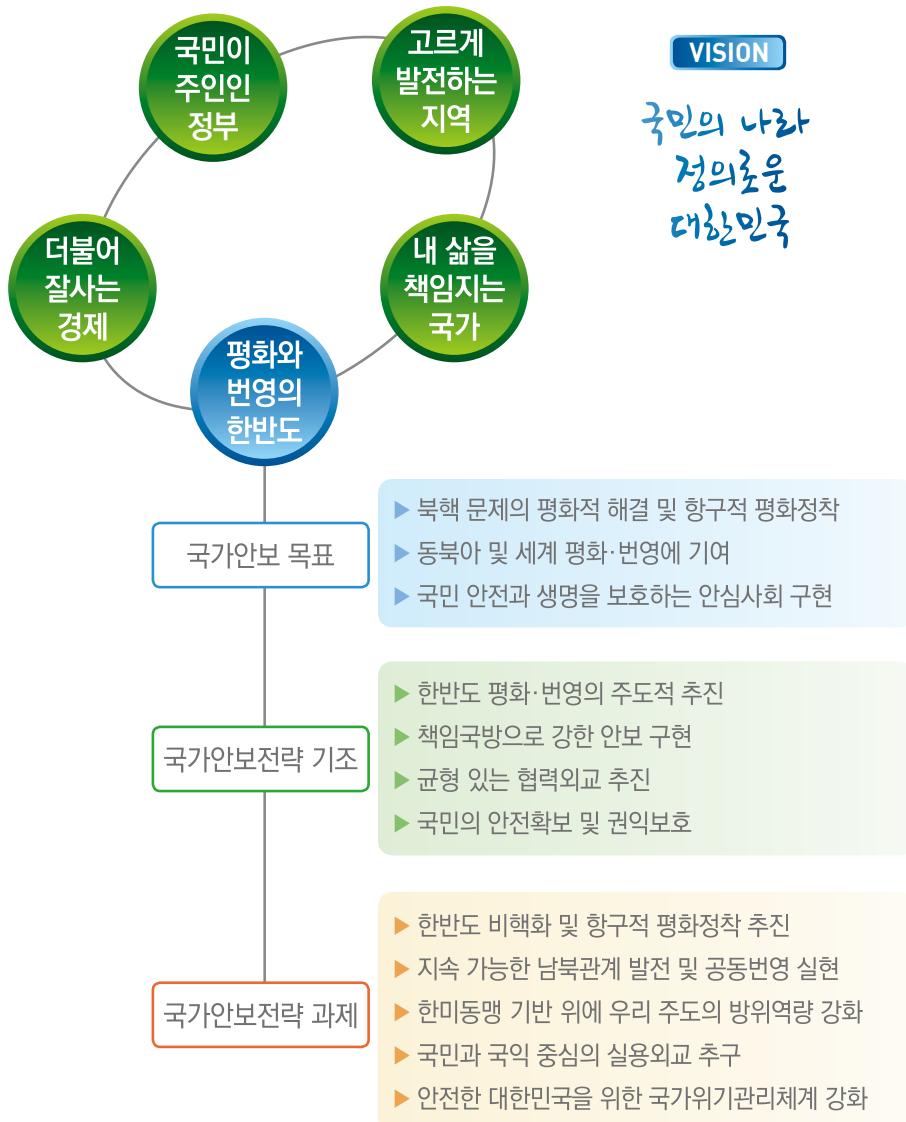


II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개관

1. 국가비전
2. 국가안보 목표
3. 국가안보전략 기조
4. 국가안보전략 과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개관





| 2017. 5. 10. |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2017. 5. 10. 제19대 대통령 취임사-”

II.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개관

II

1. 국가비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며 원칙과 상식이 존중 받음으로써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국정운영을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국민 중심’에 두고, ‘정의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공론과 합의에 의해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민생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시대를 열고 정의와 포용의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

로 삼고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포용국가 시대를 열어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외교·통일·국방을 아우르는 안보 관련 국정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선정하였다. 평화 없이는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다. 즉, 평화는 우리의 핵심 국익이며,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이다.

나아가 남북 간 교류협력 범위를 경제 분야로 확장해 나감으로써 평화가 경제협력을 보장하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선순환을 통해 공동번영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이웃국가도 함께 이익을 누리는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안보의 개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개인적 수준으로까지 확장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일 역시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로 규정하였다.

2. 국가안보 목표

정부는 대내외 도전과 기회 속에서 국익을 증진하고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을 국가 안보 목표로 설정하였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우리의 핵심 국익이고 세계 평화와도 직결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이들 세 축 사이의 상호 추동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남북 간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합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되는 관계를 만들어감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일구는 토대를 구축한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하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국방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할 것이다.

동북아 및 세계 평화 · 번영에 기여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 국력이 커짐에 따라 세계 평화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기대도 높아졌다. 이에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 번영을 증진하는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가운데 평화협력 주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음의 실천적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둘째, 인도 · 아세안 ·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정치 · 경제 협력 강화, 지역협력 제도화를 통해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에 기여한다. 셋째, 기후변화, 국제 테러, 사이버안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안보현안의 해결 노력에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중심에는 ‘국민’ 즉, ‘사람’이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안심사회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온전한 일상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이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개개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사이버위협, 테러, 재난, 생활안전 등 다양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II

3. 국가안보전략 기조

국가안보전략 기조는 ‘국가안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의 주도적 추진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균형 있는 협력외교 추진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권익보호 등 네 가지를 선정하였다. 이는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외교, 통일, 국방 및 위기관리 분야에서 실행할 추진 방향이다.

한반도 평화·번영의 주도적 추진

‘평화와 번영’은 당면한 우리의 생존전략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안보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가장 최우선적인 전략 기조이다. 지금 우리 안보에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 핵문제이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특히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역사적 돌파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되고 여건이 조성될 경우,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의 본격적인 이행을 통해 남북 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것이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협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남북대화 정례화,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남북합의 법제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¹⁾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로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해서는 안 되며, 북한의 붕괴 혹은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둘째,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며, 셋째, 평화의 제도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넷째,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를 구상하여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다섯째,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성을 갖고 추진한다.

1)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 코르버 재단 초청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내용이다.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평화와 번영은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만들어 갈 수도 없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책임국방’ 구현을 위해 확고한 국방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국방개혁 2.0」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 육성에 집중하여 국방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첫째, 전방위적인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핵심 방위역량을 구비한다. 둘째,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여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우리 주도의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작전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국방개혁 2.0」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외부환경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방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과거 국방개혁 사례를 교훈으로 삼고, 4차 산업혁명²⁾ 기술을 적용한 첨단화·정예화된 군대로 탈바꿈해 나갈 것이다. 넷째,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

2)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모바일을 통해 사람-사람, 사람-사물, 사물-사물이 연결된 상황) 기반의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편 우수한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미래기술을 선도하는데 방위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균형 있는 협력외교 추진

문재인 정부는 균형 있는 협력외교를 추구한다. 균형 있는 협력외교란 한 미동맹을 비롯한 주변 4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세안,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외교를 뜻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전통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우리 국력에 부합하도록 외교영역을 보다 폭넓게 다변화하는 외교를 필요로 한다.

첫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력외교 강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조성에 기여한다.

둘째,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추진 등으로 외교 지평을 확장하여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역량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마음을 얻는 외교’, ‘사람 중심의 외교’를 추구함으로써 신뢰 확보와 함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자연재난, 감염병, 마약, 난민 문제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고, 공공외교,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외교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의 최고 가치는 바로 국익과 국민이다. 국익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인 바, 국익 중심 외교는 곧 국민 중심의 외교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실용외교를 통해 국익 중심의 외교를 추구하는 한편, 국민의견을 외교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국민외교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권익보호

정부는 대내외 다양한 위협 및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울타리가 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위협이나 테러 등 다양한 유형의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역량을 강화한다.

2,600만 해외 여행객 시대와 재외 동포 740만 시대를 맞아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

4. 국가안보전략 과제

정부는 국가비전, 국가안보 목표, 국가안보전략 기조를 바탕으로 5개 전략과제를 설정하였다. 전략과제는 ‘국가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전략과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및 공동번영 실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 역량 강화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추구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위기관리체계 강화이다.

정부는 전략과제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회·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 등으로 협의 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자 한다.



III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

1.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 2018. 9. 19. |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5·1 경기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중략)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학약했습니다.

-2018. 9. 19. 평양 5·1 경기장 연설-

”

III.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

III

1.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1993~1994년의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어 왔다. 북한은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 생산도 추구하면서 여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종류의 다양화·경량화·소형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크게 진전시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핵 투발 수단의 확보 시도를 지속해왔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 아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안보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북한과 접촉면을 확대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끊임없이 발신해왔다.

베를린 구상 등 정부의 일관된 노력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협력을 바탕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부는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대화 동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원칙하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 다만 북핵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만큼,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둘째,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간다. 이를 위해 대화의 모멘텀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북미 간 접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남북·북미관계 개선 등 여러 관련 사안들을 포괄적·유기적으로 다루어 나가며, 비핵화와 남북·북미 관계 개선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넷째,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유럽연합, 아세안 등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을 통해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한다. 아울러 유엔, 아세안, G20 회의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해 나간다.

III



| 2018. 9. 26. | 문재인 대통령이 제73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의 협상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핵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 만큼, 정부는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이를 반드시 실현시키고자 한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란 1953년 정전협정을 통해 형성된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평화가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남북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체제 논의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남북 사이의 군사적 신뢰 증진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일관된 추진 △직접 관련 당사국 사이에 긴밀한 협의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는 평화체제 구축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둘째,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 상태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한미 공조하에 북미관계 정상화도 지원해 나간다. 셋째,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논의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3.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그 부속합의서로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상호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문제를 협의할 것이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지상과



(사진: 평양공동사진취재단)

2018. 9. 19. |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군사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상호 군사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대책 등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다. 비무장지대 일대의 홍수와 화재, 북방한계선 일대의 선박 조난 등 접경지역에서의 재해·재난에 대한 구조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군포로의 생사확인·귀환·가족상봉,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과 같은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노력을 집중하고자 한다.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 구축의 기반이 마련되면 군사력 배치와 운용을 조정하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비무장지대 내 상호 감시초소 철수와 시범적인 남북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의 군사적 보장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군사력 배치와 운용에 대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병력·무기체계의 구조와 규모를 통제하는 구조적 군비통제 문

제를 남북이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한다. 남북 사이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군비통제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협력사업, 협력지대 확대 등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III



IV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및 공동번영 실현

1. 남북대화 정례화 및 남북관계 제도화
2. 남북교류 활성화 및 인도적 문제 해결
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4. 평화 ·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제고



2018. 8. 15. |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 이야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2018. 8. 15.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

IV.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및 공동번영 실현

IV

1. 남북대화 정례화 및 남북관계 제도화

정부는 여러 분야의 남북대화를 정례화하여 남북 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남북합의를 제도화함으로써 합의 결과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남북대화의 정례화·상시화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모든 현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방침하에 「베를린 구상」 등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 4월과 5월 연이어 개최되었다. 특히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에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의 개막을 천명하고 남북 공동번영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향후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분야별 남북대화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이행방안이 마련되면, 분야별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사·사회·문화 분야는 물론,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 분야까지 다방면의 대화와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8년 9월 개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자 간 상시 소통 창구와 연락채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남북기본협정」체결 및 남북관계의 제도화

남북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기존 합의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변화된 환경과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합의로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등을 계기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남북기본협정」이 체결되면 국내적으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국제적으로는 유엔의 지지 결의 등을 통해 국내외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 합의를 법제화해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기존 남북 간 합의는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어렵게 만들어 낸 노력의 결실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이행은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적 공감대, 국제사회 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체결할 중요한 남북 합의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제화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제도적 자산으로 만들고자 한다.

2. 남북교류 활성화 및 인도적 문제 해결

정부는 남북 간 다방면의 호혜적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등 인도적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돋는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양한 남북교류의 활성화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 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표명하였다. 이는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 2018. 2. 9. |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입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대규모 참가, 개막식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평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4월에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에 합의해 종교·체육·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가 이루 어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IV

앞으로도 정부는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감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다져 나갈 것이다. ‘6·15, 10·4 기념행사’ 등 남북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날을 계기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동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 또한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 남북이 공동으로 참가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의 공동개최 유치를 노력하는 등 체육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겨레말 큰사전」 편찬과 개성 만월대 발굴 등 그동안 중단되었던 협력사업과 함께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산림 병해충 및 산불 방제, 그리고 공유하천의 수해방지 등 개발협력 분야의 교류도 재개하고자 한다.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민간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교류협력을 추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들과 다차원적인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민간 부문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정부는 2017년 9월 신설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 협의체」를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남북 왕래와 접촉 등 교류협력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남북 간 합의서 보완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산가족 · 국군포로 · 납북자 · 억류자 문제 해결

정부는 인도적 문제를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어떠한 사안보다 우선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

에서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초래된 남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및 억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의 전원 상봉을 목표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전면적 생사 확인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산가족 교류방식을 고향방문, 서신교환,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으로 다양화, 상시화, 제도화하는 단계로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산가족의 교류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도 추진할 것이다. 상시적인 상봉을 위해 상설면회소를 조속히 개소하는 한편, 유전자 정보 보관, 영상편지 제작사업 등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기록물 수집·전시, 이산가족 디지털 박물관 운영, 지역별 이산가족 초청 위로행사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국내외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남북관계 차원의 해결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생사확인, 서신 전달, 송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인도적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간의 일회성·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 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다.

첫째,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보건의료, 긴급구호 분야의 협력을 우선 추진한다.

둘째,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보장하고 대북지원 사업 공여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한다.

셋째, 체계적이고 엄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의 분배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판문점선언」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 인권 개선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실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하고, 국내외 관련 시민단체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 추진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은 남북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과 현장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의를 거쳐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에는 3개년 계획인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을 수립하여,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할 50여 개의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과제를 구체화 한 바 있다.

정부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주체들의 역량을 조직화·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상호 이해를 넓혀갈 수 있도록 소통과 접촉,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통합 측면의 정책도 지속 추진할 것이다.

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구상의 기본목표는 북핵 문제 진전 등 여건이 마련될 때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남북한 공동번영과 경제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를 넘어 북방과 남방을 포괄하는 주변 국가와의 상호협력으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여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하겠다는 것이다.

상호연계성 고려 단계적 추진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능동적으로 구상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향후 여건이 마련되면 사업들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최근 북한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경제 요소의 확산을 남북경협 과정에 접목시켜 에너지·자원·물류·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주변 국가의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는 남북을 넘어 동북아·유라시아로 이어지는 대륙과

철도 연결을 통해 주변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향후 '동아시아철도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한반도 신경제구상 개관〉



3대 벨트와 ‘하나의 시장’ 형성 추진

한반도의 활동해권에서는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몽골과 러시아 등 북방지역의 전력 여유분을 한반도와 일본까지 연계하는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논의,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한반도 가스관 연결사업, 그리고 남북 간 자원 공동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다.

환서해권에서는 풍부한 인구와 산업 인프라, 활발한 교역 등을 토대로 물류와 산업으로 특화된 경제벨트를 구축한다. 이미 상당한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와 중국의 경제협력에 북한이 동참할 경우 다양한 다자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북한의 개성-해주, 평양-남포에서 협력을 이루어낸다면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경의선을 축으로 국제적 산업협력의 성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접경지역에서는 수자원과 산림자원의 공동 관리를 시작으로 감염병과 병충해 공동 방제 · 방역과 같은 남북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그간의 비무장지대(DMZ) 활용방안 연구를 참고해 친환경적 생태관광지구로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남북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인적 ·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 · 제도적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협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협의, 산업 표준의 단일화를 위한 교류와 용어 정립, 남북 간 경제공동체 진입을 모색한다. 이에 대한 국제사

회의 인정을 위한 합의 체결 등을 추진해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자 한다.

제도개선 ·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기반 조성

우선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남북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경협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체계를 충분히 마련하고자 한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각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부와 민간 외에도 국제금융기구, 글로벌 기업, 투자 자본 등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재원조달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남북 간, 국제사회 차원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 구상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사이의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활용하여 남북 간의 상시적인 협의, 공동연구조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비전을 공유한다.

4.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제고

다양한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든다. 일관성 있고 균형 잡힌 통일교육 추진으로 범국민적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을 키워 나가는 한편, 우리의 한반도 평화구상과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다. 그동안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된 통일정책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제도화해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일방적·하향식 논의구조에서 탈피해 민간이 주도하고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협약 체결이라는 결과보다는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기반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합의가 용이한 부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평화·통일 논의와 공감대를 지역사회로 확산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평화·통일문제 공론화, 통일교육, 남북교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지역사회 내 통일 관련 업무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통일 관련기관을 연계·통합해 체계적인 대국민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통일문제에 대한 소통 및 논의의 허브(Hub) 역할을 할 ‘통일+센터’³⁾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주요 지역별로 ‘통일+센터’가 설치되면 민간-정부 간,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은 물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교육 활성화

통일교육은 국민들의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과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북한과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

3) 기존에 탈북자를 지원하던 하나센터와 통일교육을 지원하던 통일교육센터를 통합하여 남북 교류 협력지원 등 다양한 통일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이다.

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시민단체, 교육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통일교육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함으로써 통일교육의 균형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자 한다.

또한 통일 한반도의 주역이 될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젊은 세대들은 민족에 기반한 당위론적 통일 논의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실질적 관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이러한 인식을 고려해 맞춤형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다. 더불어 생활 속에서 통일문제에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영상·교재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통일교육 지원법」(2018년 9월 시행) 개정을 계기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통일교육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평화·번영의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우리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정부는 출범 이후 주요국과의 정상외교, 정부 간 대화, 국제회의 등 주요 계기마다 한반도 평화 비전과 구상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 앞으로도 유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양자 또는 다자간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아울러 해외의 한반도 전문가, 관련기관, 재외동포 등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1.5 트랙과 2.0 트랙 대화를 활성화하고, 국제세미나, 국가별 연구모임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인 공감대와 지지 기반을 확대할 것이다.



V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 강화

1.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
2. 「국방개혁 2.0」을 통한 정예화된 강군 건설
3. 우리 군 주도의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축
4.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 육성



| 2018. 10. 1. |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내빈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의 맨 앞자리에 서야 할 때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는 군의 사명이며, 평화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강한 군대입니다.”

-2018. 10. 1.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V.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 강화

V

1.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

국방태세 확립과 철저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다. 정부는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 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다.

평시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도권과 주요 지역 · 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전시키고, 민 · 관 · 군 · 경이 통합된 비상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비한 안보태세 확립과 방위역량 구축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 테러, 대규모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에서는 역내 국가들 사이에 영토 및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방위적인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영토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안보태세와 방위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한 대응전략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발전시키는 한편 비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주 공간이 주요 전장영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주 공간에서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등 국방우주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국방 차원의 노력 강구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은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선전 방송을 중단하고 방송시설을 철거하는 한편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남북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등 구체적 조치를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 여건 조성을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감정을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한다.

2. 「국방개혁 2.0」을 통한 정예화된 강군 건설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

「국방개혁 2.0」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국방개혁의 정신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안보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실행 계획이다.

「국방개혁 2.0」은 전방위적인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에 의한 가용 병역자원의 감소,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정신 등을 반영하였다.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정부 차원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확



| 2018. 7. 27. | '2018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한 지휘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례하고 있다.

보할 것이다. 더불어 인력 및 전력운영 방식 개선 등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국방비 절감 노력도 병행한다.

또한 국방개혁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조기에 정비하는 등 법적 · 제도적 추진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안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군 구조로 발전

최근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 · 비군사적 위협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태세 및 역량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우리 군은 안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발전시키는 한편 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우리 영토를 지키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전방위적인 안보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여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로 발전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지휘구조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우리 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와 육·해·공군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합동성⁴⁾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부대구조는 다변화된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투부대 중심으로 개편하고, 병력구조는 병력수급 전망을 고려해 전투임무는 군인 중심으로, 비전투 임무는 민간 인력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전력구조는 미래전에 대비한 역량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우선 확보하는 한편, 예비전력은 상비병력의 규모 조정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예화한다.

4)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상·해상·공중전력 등 모든 전력을 기능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능력 또는 특성이다.

셋째, 비핵화 및 평화체제 도래 등 안보상황 진전에 대비한 군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의 강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국방 문민화 확대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

정부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확립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와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국방 문민화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국방 분야 민간인력의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국방 문민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더불어 군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방인력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교육훈련체계를 정비한다.

국방획득체계 업무 전반에 대해 투명성·전문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방 연구개발 강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구비한 방위산업 구조로의 전환 등에 중점을 두고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방위사업 분야 위법행위는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다.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 및 감독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비리가 발생하면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3. 우리 군 주도의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축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우리는 지난 6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일구어 왔다. 이제는 우리의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한미 정상은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공감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⁶⁾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지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수 정안을 포함한 주요 전략문서에 합의하는 등 성공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
- 5) 한미 양국이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14년 10월)에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은
 ①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③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 6)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는 한미 사이에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국방 관련 최고위 협의체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 위기관리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화장억제협의체(DSC, ED-SCG)⁷⁾ 등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확장억제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전방위 안보위협에 맞춤화된 대응능력을 강화시킨다.

한미 양국은 군사대비태세를 공고히 유지한 가운데 우리 군 주도의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추진여건을 마련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재정립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한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방위역량 조기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연습과 겸증을 통해 연합작전 지휘 및 기획 능력, 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다.

7)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는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미 차관보급 정례 협의기구다. 한미화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는 한미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외교·국방 고위급 대표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미 차관급 정례 협의기구이다.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구축하고, 첨단 정보·감시·정찰전력, 원거리 정밀타격전력 등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V

4.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 육성

장병 인권 보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정착

사회적 변화 추세에 부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될 때 군의 기강이 확립되고 강한 군대 육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장병들이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병영문화를 조성할 것이다. 전투 준비와 휴식이 조화되고 자기 개발이 가능하며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병영문화 정착도 중요하다.

장병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군내 인권침해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

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⁸⁾을 설치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의혹을 해소시킬 것이다.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병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군 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병 봉급 인상, 군 의료 및 급식체계 개선, 비전투 업무 최소화,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개선 등 군 복무여건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하고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군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양성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병무청, 국세청,

8) 군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군내 인권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공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검증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것이다.

국방 관련 제도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개선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 군사시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분야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을 올바르게 알리고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공공정보에 대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할 것이다.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추구

독립·참전 유공자, 민주 유공자와 제대군인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최상의 예우와 보상을 지원한다. 또한 보훈가족이 소외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2018. 10. 1.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유해 봉환행사에서
6·25 참전 국군 전사자 유해에 참전기장을 수여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발굴과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6·25 전사자의 유해발굴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 보훈정책 중의 하나이다.



VI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추구

1.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2. 외교 다변화를 통한 외교의 외연 확대
3. 중견국으로서의 국제역할 확대



| 2018. 11. 14. |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국익과 국민을 우리 외교의 최고 가치로 삼아 실사구시 실용외교를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안보와 평화를 이끌고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익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외교 방향을 정하고 국민 안정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17. 12. 19. 제54회 국무회의-

VI.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추구

1.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전방위적인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역내 불안요인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호혜적 · 포괄적 한미동맹 발전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 ·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동맹의 호혜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토대로 제반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첫째, 외교 · 국방(2+2)장관회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확장 억제전략협력체(EDSCG) 등 양국 간 외교 · 안보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

계해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 둘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들이 동맹의 호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공동가치에 기반해 한미동맹을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사이버,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 글로벌 차원의 주요 정책과 사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 및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조는 물론, 평화유지활동, 국제 테러



2017. 11. 7. | 청와대에서 한미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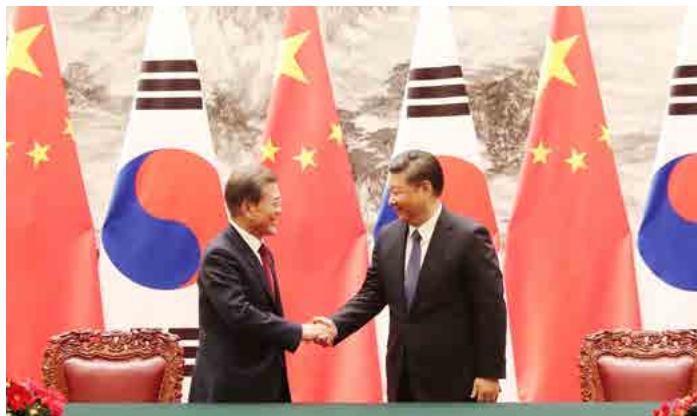
리즘 대응,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공동대응도 강화할 것이다.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

한중은 2017년 10월 한중관계 개선 협의 및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 등을 통해 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향후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해 양국관계 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한중 간 신뢰를 회복하고 긴밀한 소통채널을 강화한다. 정상 간 핫라인을 적극 가동하고 민·관을 포함하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교류협력의 복원 및 확대

VI



2017. 12. 14. |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전 양국 정상이 악수하고 있다.

를 도모할 것이다.

둘째, 양국 국민들의 민생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경제협력의 효과가 양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양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별 장점을 결합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한다.

셋째,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중국에 대한 외교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일본과 역사문제 해결 및 실질협력 병행 추진

일본은 지리적·문화적으로 우리의 가까운 이웃국가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정부는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관계 구축’을 일본 외교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와 고위급 소통·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개선 및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일본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한다.



2018. 5. 9. |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 · 중 · 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이 양자회담을 마친 후 약수하고 있다.

VI

셋째, 저출산 ·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한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 인적교류 확대 같은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강화한다.

넷째, 한일 간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역사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특히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결여되었다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검토 결과를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자분들의 명예 ·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다.

러시아와 호혜적인 실질협력 증진 및 신뢰 강화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협력국가인 러시아와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자 한다. 정상회담과 각계 고위급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정례적인 정상회담 개최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의회 차원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학계·문화계 등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다.

경제 잠재력이 큰 러시아는 한반도와 유라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호혜적인 협력 대상국이다. 정부는 농·수산, 보건·의료, 환경·인프라 등 두



2017. 9. 6.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마주보며 웃고 있다.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 에너지·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⁹⁾과의 FTA 체결 추진 등 양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러 3각 협력 추진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인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구상인 ‘신북방정책’의 실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3각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여건이 마련될 경우 에너지·철도·전력망 등 의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다.

9) EAEU(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5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으로 2015년 1월 출범하였다.

2. 외교 다변화를 통한 외교의 외연 확대

동북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와 더불어 보다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다자 차원의 협력도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외교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추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되 이 지역에 머물지 않는 협력외교를 펼침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우선 동북아 지역 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국가 간에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고 역내 다자협의가 정례화·제도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과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유럽안보협력기구(OSCE)¹⁰⁾ 등 역외 주요 파트너들이 다자협의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한다. 이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 동

10)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정치·군사 안보, 경제·환경 안보, 인간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안보 개념에 기초한 유럽-대서양 국가 간 안보협력기구이다.

북아 지역의 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다자협의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평화협력 발전의 저변이 될 분야별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또한 역내 주요국들과 다양한 소다자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하고,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 등 역내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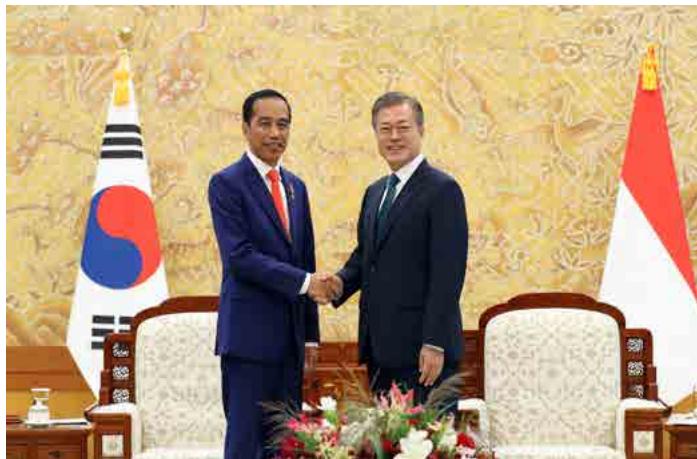
VI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한 아세안, 인도 등과의 관계 강화

정부는 아세안, 인도 등과의 관계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강화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들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아세안과 3P(People, Prosperity, Peace) 중심의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상생번영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공동체’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인적교류,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교류를 촉진, 지원할 것이다. 또한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아세안 국가 내의 개발 격차 해소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동반 성장을 모색할 것이다.



2018. 9. 10.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아세안 국가들과 정상 및 고위급 교류도 확대해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도 등 신남방정책 추진의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이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교역·투자, 방산, 인프라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공동번영을 도모한다.

정부는 2018년 8월 28일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수립, 중점과제 선정



2018. 7. 10.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가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VI

및 관련 부처별 조율, 주요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상황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한 유라시아 평화 · 번영 지대 구축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통 · 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해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 ·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해 2017년 8월 25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유라시아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FTA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교역 · 투자 확대를



| 2017. 9. 6.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한·몽골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트톨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각국의 다양한 역내 협력강화 이니셔티브와 신북방정책을 연계해 유라시아 지역과 에너지·물류망을 구축하고 호혜적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적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의 지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3. 중견국으로서의 국제역할 확대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 강화

정부는 국제사회의 글로벌 현안 해결 노력에 능동적인 대응 및 기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것이다.

첫째,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 및 의장단의 수임을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영향력을 강화한다.

둘째, 평화유지활동 및 군축·비핵화 레짐 참여, 테러·사이버위협 공동 대응, 민주주의·인권 증진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셋째,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글로벌 현안 논의 시 우리 역할과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평화 구축, 인도적 지원, 보건, 교육 등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진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의제들을 적극 발굴한다.

넷째, 미타(MIKTA)¹¹⁾를 내실 있는 협력체로 발전시킨다. 새로운 협력 사

11) MIKTA : 우리 주도로 2013년 출범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등 5개 중견국가들의 모임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의 약자) / 북핵, 테러리즘, 인도지원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공동 입장을 표명하고, 각종 다자회의 계기 외교장관회의 개최 및 국회의 장회의, 고위급회의, 정책기획협의회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민타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중견 국가들의 협의체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자유무역 질서 확대와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정부는 새로운 국제 경제환경과 통상규범에 대처해 나가면서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G20,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경제협의체를 활용해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을 만드는 후속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¹²⁾, 녹색기후기금(GCF)¹³⁾과 협력을 강화해 전 세계 녹색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환경 관련 국제 논의에 있어서도 미세먼지 등 동북아 역내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양자·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12)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로 2012년 10월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하였다.

13) GCF(Green Climate Fund)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설립한 재정운영기구이다.

적극적 다자외교 추진을 위한 협업 · 소통체계 확충

정부는 다자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효율적인 협업 · 업무조율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정부단체(NGO) · 학계 등 시민사회와의 소통체계도 확충할 것이다.

국제 개발협력 강화

정부는 개발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국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정착, 개도국과 협력관계 증진 등 주요 외교 · 안보 정책과제 추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중견 공여국으로서 민주주의 제도 구축, 빈곤 퇴치, 인권 증진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수립한다.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시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재외공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선진 공여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VII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위기관리체계 강화

1. 국가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발전
2.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능력 강화
3. 테러 대응체계 보완 및 발전
4. 재외국민 안전 및 권익 보호



2017. 8. 21. 문재인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2018. 1. 10. 신년사-

VII.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위기관리체계 강화

1. 국가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발전

국가위기관리 및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발전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 차원의 안보위기와 재해·재난을 효율적·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위기 징후와 경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관별 가용수단과 자산을 통합 관리해 나간다.

둘째, 청와대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수직적 분업과 주관부처-유관부처 간 수평적인 협업을 촉진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VII

셋째, 지역사회와 주민이 참여하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 재난피해에 대한 지역공동체 전체의 회복력을 높인다.

넷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¹⁴⁾를 추진하는 등 국민생활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 할 것이다.

재난 현장의 신속한 대응능력 제고

육상, 해상, 공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한 현장 지휘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구조기관·지방자치단체·중앙부처 사이의 신속한 상황보고와 협업체계를 구축 할 것이다.

소방·해양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현장대응 기관들의 신속한 인명 구조와 재난복구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장비를 보강해 나간다.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실전 중심의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감염병·가축 질병·산불 등의 대규모 재난시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14)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2022년까지 3대 분야(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사망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이다.

국가 비상대비 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

국가 위기시에 대비하여 민방위 경보·동원체계 관리, 전시 정부기능 유지, 원활한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핵심기능 수행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비상대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인 정부연습모델을 개발한다. 둘째,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민방위 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재난대응 중심의 생활민방위, 국민참여형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셋째, 민방위 재난대피시설을 신축·확대하는 등 민방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보호할 것이다.

VII

2.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능력 강화

사이버 공간은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협은 실제 국민 생활 안전과 국가안보를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민·관·군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민·관·군 협력의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확립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협은 민·관·군의 영역 구분 없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적 사이버안보 위협이 발생할 경우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안보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안보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이다. 아울러 민·관·군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이버위협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발전시킨다.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정부는 사이버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공공기관과 주요 기반시설의 정보통신망 등 핵심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사이버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해 예방하기 위한 최신 기술을 꾸준히 확보한다.

각급 기관별로 예방 및 대응 전담조직을 설치해 소관 분야의 사이버 공간을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차원의 위기 관리 연습과 연계해 민·관·군 합동훈련도 실시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

사이버위협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이버 공격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및 시행한다.

사이버안보 기반역량 강화

사이버안보는 단순히 기술적 공격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한 국가 전체의 사이버역량과 정보역량을 융합하는 작업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정부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원천적·선도적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개선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활성화

사이버위협은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대책만으로는 완벽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초국가적인 사이버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교·국방·정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연합, 아세안 등 지역 협력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안보 규범 형성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3. 테러 대응체계 보완 및 발전

국제 테러단체인 알카에다의 세력 약화와 ISIS의 중동지역 패퇴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연계되어 있거나 동조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들 세력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난민이나 근로자 등으로 위장 침투하여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테러수법이나 활동 방식도 날로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테러 이용수단도 차량·흉기 등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사제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비밀리에 테러자금과 조직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 테러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테러 대응체계를 보완·발전시키고자 한다.

테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테러 위험인물과 총기·폭발물·화생방 물질 등 테러 이용수단을 관리하는 등 범정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신종 테러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배양하는 한편, 테러 표적이 될 수 있는 국가 중요 행사·시설과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테러·안전관리 체계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국내외 정보협력 확대 및 대응조직 역량 강화

테러 첩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국제 테러분자의 국내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연합, 인터폴 등 국제기구 및 우방국 대테러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더불어 테러 징후를 사전에 예측·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테러 유형별 상황 숙달훈련을 실시해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테러상황이 관계기관에 적시에 전파되어 신속히 테러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테러 정보 통합·공유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에 따른 대테러 활동

대테러 관계기관이 테러 예방·대응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모니터링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확충할 것이다. 또한 테러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 조치사항 등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테러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와 복구비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할 것이다.

테러대응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테러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선진국 수준의 테러 대응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4. 재외국민 안전 및 권리 보호

정부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들에게 맞춤형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해외 안전여행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여행 경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개선해 해외 사건·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사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진출 및 체류하는 동안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비자면제협정, 워킹홀리데이협정,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등 영사분야 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재외국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영사 민원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외 국민들이 국내와 유사한 수준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편리한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정부는 2020년까지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¹⁵⁾을 도입하는 등 해외에서 국민들의 신분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5) 2020년 목표로 폴리카보네이트(Poly Carbonate) 재질의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국가안보실

문 의 02-730-5800

www.president.go.kr

발간등록번호 12-1025000-000002-01

출판 다원디자인프린팅

이 책의 내용 및 사진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